



농산물 포장과 물류 문제 해결방안

A Device of Packaging and Logistics Farm Produce

김선유 / 한국농산물류(주) 경영기획실장

1. 고비용·저효율 구조, 언제까지 답습하려는가?

정부는 연간 6조원에 달하는 농산물 물류비를 4조원대로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실행 1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무슨 이유에선지 탁월한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공영도매시장 시행에는 미온적으로 대처, 자칫 일궈 마련한 정책이 표류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은 농산물을 포장출하 하여 상, 하차 기계화는 물론 비포장 출하로 과다 발생하는 제 물류비용을 줄이고 시장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그 정책 목적이 있음에도, 정작 농림부 당국은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정책 실현에는 소극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물론 한 정책이 시행, 정착되기까지는 현장에서의 시행착오 극복과정이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상충을 완화, 최소화하는 일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이해하나, 확고한 정

책의지와 정책실현을 위한 일사불란한 정책추진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아프게 지적하고자 한다.

2. 공(公)기능과 공인식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은 판매사업이 아니라, 임대사업이다.

국가 또는 기업이 출하용 상자를 제작, 보유하고 있다가 사용자인 농민, 출하주가 농산물을 출하할 때 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항구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소비지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권장하고, 농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의 70%를 국고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사업은 그 의미나 규모로 미루어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다. 전 농산물의 포장출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박스를 보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흐름을 시스템화하여 유통상 손망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출하자는 농산물 박스를 사용, 포장출하만 하면, 그 밖의 흐름은 공권력이 지탱하는 시스템으로 순환시키는 공기능화 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초기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이런 공기능에 대한 공인식 확산이다.

3. 농현실에 충실한 정책만이 성공한다.

모든 정책의 성패는 농현실을 얼마나 잘 꿰어, 시행의 묘(妙)를 살려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용두사미화 한 악순환을 얼마나 치러 왔는가. 본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의 경우

첫째, 생산출하자가 감당해야만 할 30%의 자부담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산출하자가 농산물유통 개선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30%라는 적잖은 부담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둘째, 정부 보조로 이뤄지는 본 사업에 부가가치세 적용은 비합리적이다. 결국 사용자인 농민 (사진) 농산물을 포장한 골판지상자



에게 부가세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는 비현실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으로 정책의 활성화보다 역기능에 대한 경계심리가 공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검증 강화는 별도의 모색을 통한 기법 창출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4.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한다.

본 사업의 목적이 국가 물류비 절감과 함께 환경개선에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 문제'라는 인식을 넘어 범국민적 화법을 도출하여,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모두의 인식을 바탕으로 제 문제를 척결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라는 절대 명제야말로 우리 농업의 유일무이한 활법(活法)임을 인정할 때만이 관행과 집단이기주의의 벽을 일거에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배추의 경우 걸잎 등을 밭에서 떼어 내면 훌륭한 거름으로 쓰이지만 지금처럼 원물 그대로 도시에 들어오면 엄청난 쓰레기가 되어 환경을 해치고,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는 전근대적 출하방식을, 경비는 현격하게 줄이고, 효율은 극대화 할 수 있는 파렛트출하로 바꾼다면 배추 한 품목만으로도 1년에 1,92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 포장출하를 왜 정착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성숙된 시민사회의 시금석이 여기 있는 것이다. 공인식으로 사회 순기능을 복돋을 수 있는 길이! [K]